

수신 ; 참여연대

제목 ; 윤리특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반부패는 현재 세계 모든 국가의 화두이며, 특히 공직윤리의 확립은 우리나라 전체의 반부패와 윤리 고양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윤리특위의 정상화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윤리특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야간에 요구하는 내용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특위의 운영은 회의체의 특성상 여야간의 합의정신에 의한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 윤리특위가 속히 정상화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2.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구체적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개정된 국회법 등에서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이해관계 있는 위원회로의 안전회부 제한, 의원석방요구안 발의요건 강화, 윤리심사절차의 개선,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점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개혁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규칙의 연구검토 및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 11. 21

국회운영위원장 정세균